

## 『단검과 마녀』

정 우 성 (변리사, 입안장특허사무소 대표)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시리즈로 정리해봅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조심조심 제 입장을 밝혀볼 작정입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두 개의 큰 줄기와 여러 개의 작은 줄기들로 직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줄기는 위안부에 대한 한국인의 ‘공적 기억’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며, 두 번째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라는 ‘권력’에 대한 고발입니다. 첫 번째 줄기와 두 번째 줄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저자는 정대협이 한국인의 공적 기억을 가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책이 가지고 온 파장과 진동은 이 책의 큰 줄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작은 줄기와 겹가지가 독자로 하여금 끝없는 질문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독자에게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반작용을 불러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독자로서 저의 관점에서는 무수한 작은 질문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음을 고백해 둡니다. 먼저 큰 줄기를 다룬 다음에 나머지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 1. 편집에 대하여

내용의 진위와 그것이 가져오는 논쟁과 파장의 국면을 제외하고, 단순히 책의 완성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도 서평으로서는 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선 이 책은 상당히 거칠게 편집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정대협의 태도에 대해 강한 적개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저자의 양심에서 비롯되는 정의감일지도 모릅니다. ‘화해를 위하여’라는 아름다운 장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녀는 이른바 가공된 기억을 만든 활동가 권력을 향한 투쟁심으로 책을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자의 그런 과잉된 의욕이 이 책을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백과사전식 편집을 낳았으며, 그런 편집이 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게다가 ‘해결’로 가는 길을 제시하려는 저자의 조급함도 이 책을 방향하게 만듭니다. 공론이 만들어져야 올바른 해결방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안부 문제에 공적 기억(이런 기억도 공론의 기초가 됩니다)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기억을 교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터입니다. 요컨대 그 공적 기억을 흔들려는 제1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 책의 다른 부분이 제1부의 이야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오히려 책을 분권하여 전3권으로 구분한 다음에, 위안부에 대한 한국인의 공적 기

역, 식민지 시대인식에 관한 저자의 입장과 정대협 의 문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인, 일본정부, 일본의 역사관을 차례로 분권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나 생각하며 아쉬워합니다.

저자 스스로가 일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어서 책에는 소설 속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문학 속에 나오는 위안부’를 주제로 연구 분석하는 논문에는 어울릴망정, 이 책에는 온당치 않습니다. 이 책은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룹니다. 객관적 사료와 사실을 다루면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증언자의 증언을 경청하면서 팽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주 소개해버림으로써 저자가 인용한 실제 증언자의 증언의 신빙성까지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는 아마도 문학을 연구하는 저자의 습관일 것 같습니다. 지엽적인 문체이야기입니다만, ‘그런 한’이라는 저자 특유의 표현이 너무 많이 반복됩니다. 이런 일본식 표현은 현대 한국어에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편집자가 걸러 내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개 교수들의 저서는 편집자가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편집자의 고충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 2. 넌, 누구를 이롭게 하느냐?

배타적 감성이 짙은 곳에서는 항상 편 가르기가 유행합니다. 모든 근본주의는 배타적 감성을 낳습니다. 종교 근본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근본주의, 예컨대 전체주의, 민족주의, 심지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민주주의조차 습관적으로 피아를 구별합니다. 피아 구별에 대한 배타적 감성은 보수주의자들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른바 스스로를 진보파라고 여기는 사람조차 엄청난 배타성을 뽐내곤 합니다. 이념에 충실하지 않은 주장과 반론은 다시 너는 아군이나 적군이나를 심문하게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역사인식은 두 가지 배타성을 보입니다. 하나는 빨갱이 이데올로기이며 또 하나는 친일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두 이데올로기의 공통점은 맥락을 무시하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결론만을 추궁한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사용한 단어나 문장이 좌파적이면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포섭되고, 매향가지로 단어와 문장이 일본에 이로우면 친일파 이데올로기에 포섭됩니다. 그리고 마녀사냥이 펼쳐집니다. 그 혹은 그녀의 맥락과 진심은 배타적 감성에서는 무시됩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확실히 한국 측(위안부에 대한 가공된 공적 기억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거나 방관을 한 한국정부, 한국 시민단체, 한국 활동가)보다는 일본 측(일본정부, 일본 일부 단체나 활동가)의 편을 드는 것처럼 읽힙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측은 진심으로 노력했다고 인정하고 옹호함에 비해, 한국 측은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기억을 만듦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는 취지로 저자는 말합니다. 만일 “진실”이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전쟁 상태에 있다면 저자는 틀림없이 반역죄로 추궁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며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말할 수 있는 국

면이라면 저자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어떤 역사적 탐구를 함에 있어서, 저자가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어느 나라에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진술이 의도된 거짓으로 직조된 것인지, 아니면 양심에 의한 진술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만일 그렇다면 그 주장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저자는 일본 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것은 “화해를 위해서” 먼저 “이쪽”의 오해를 풀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저자는 “저쪽”의 이해보다 “이쪽”의 오해가 극심해서 화해는 요원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예컨대 고노담화(1993)와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제 준하는 행위를 한 것이며, 특히 민간 기금은 사죄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일조약과 일본 정치의 상황을 일본정부가 합리적으로 고려하면서 입안한 정책이었으므로 한국 정부와 위안부 단체들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 일본정부의 태도를 오해하고, 오히려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일본 사회에서 “협한”이 출현하고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저자는 비판합니다.

이런 저자의 태도는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상식적인 이해, 즉 한국 측에서 그렇게도 요구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통감과 사죄를 일본정부가 외면해 왔다는 이해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해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저자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민당 의원의 숫자가 세 배나 되는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회’를 제치고 ‘정부’ 중심으로 만들어 진 것이 ‘기금’이었다. 다시 말해 ‘기금’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만 그 주체가 국회가 아닌 정부였을 뿐이다. 더구나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꼭 ‘자민당’이 실질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은 ‘기금’의 성립과 실시에 열심히 나선 이들이 자민당 사람들이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P.178)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라는 제약과 ‘강제연행’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국회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그 책임 주체가 정부로 넘어갔을 뿐이다. 형식은 ‘민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국고금’을 반 이상 사용한 보상이었다. 국민모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정부가 끝까지 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국고금에서 지출한 금액은 전체 사업비용의 90퍼센트에 가까운 금액이었다고 하니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상이었다.”(P.183)

제 개인적으로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 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쪽’의 ‘이상적인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쪽의 정치적 결속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문제 해결의 의사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저쪽’의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게다가 이쪽의 이상적인 입장을 추동하는 ‘공적 기억’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국의 위안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서 이 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일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해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내부의 배타성을 점검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자의 견해와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그 오류를 공론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 책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설득력 있는 반론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1993년 고노담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아베 정부는 고노담화를 검증하려고 시도했는데,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협의에 의해서 고노담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본정부의 독자적인 조사와 판단에 의해서 담화가 작성되었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한국정부의 입장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일본정부가 지난 20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독자적인 조사와 판단’ 아래에, 아래와 같은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자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사회는 지난 20년 간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공적 기억을 왜곡함으로써, 일본사회에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불러왔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 3. ‘순수배양’된 위안부 이야기뿐

제국의위안부의 첫 문장은 “위안부란 도대체 어떤 이들일까”입니다. 이 첫 문장이 이 책의 전반부를 규정합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박유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말하기는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해결책이 아닌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가 곧 해결책인 구조입니다. 저자의 다양한 인용과 논증은 그저 저 질문에 봉사할 뿐입니다. “위안부란 도대체 어떤 이들일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정적 편향 외에 특별한 지식이 없는 보통의 한국인에게 이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군에게 강제연행되어 성적 노리개로 전락한 식민지 시대 불쌍한 조선인 소녀’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때에는 잔혹한 일본군을 으레 떠올립니다. 정신대 소녀이든 위안부 소녀이든 어쨌거나 강제로 끌려가서 가녀린 몸이 짓밟힌 순수한 이미지의 조선인 소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박유하는 이 대답을 낮설게 만듭니다.

제국의위안부는 위안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감정(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과 견고하게 붙어 있는 그런 감정)을 낮설게 합니다. 그런 낮설게 하기 효과가 이 책의 존재 이유입니다. 박유하는 마치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것처럼 태연하게 공권력에 의한 강제 연행은 거의 없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주범은 과립치한 조선인 민간업자이며, 집단이 아닌 단독으로 위안부가 되었고(P.47), 굳이 말하자면 식민지의 경제적 빈곤과 인신매매조직의 활성화 등 당시 사회 구조의 결과(P.112)를 탓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대와 위안부는 전혀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사실에 관한 박유하의 주장은 몇몇 오류는 있겠으나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아도 박유하의 이야기가 거짓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알고 있을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박유하는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람마다 해석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박유하가 본 사실은 위안부는

다양하게 모집되었고 실제대로 다양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일제가 어린 소녀까지 끌고 가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한국인의 ‘공적기억’은 순수 배양된 위안부 이야기일 뿐이며, 그저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피해의식을 만들 뿐이지 화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박유하가 제시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국의 위안부』가 내보이는 사실인식과 해석의 관점이 일본 우익이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유하가 마치 일본의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여 온갖 비난을 쏟아내지만 그것은 맥락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책 곳곳에서 위안소의 운영과 관리를 일본군이 했고, 일본군이 수요를 만들었으며 그 수요가 결국 민간 포주들의 만행(감언이설, 인신매매, 유인납치, 임금갈취 등)을 불러온 것이므로 일본의 책임이 부인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책임이 어째서 “강제연행”에만 국한되어야 하느냐, 왜 군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강제연행이라는 담론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저자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군인이나 헌병에 의해 끌려간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P.39)

“군이 물리적으로 행사한 ‘강제연행’을 글자 그대로 ‘강제 연행’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강제연행’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사기든 납치든 업자와 포주들이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일이 빈번했던 위안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범자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살인교사와 비슷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한 것이 군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P.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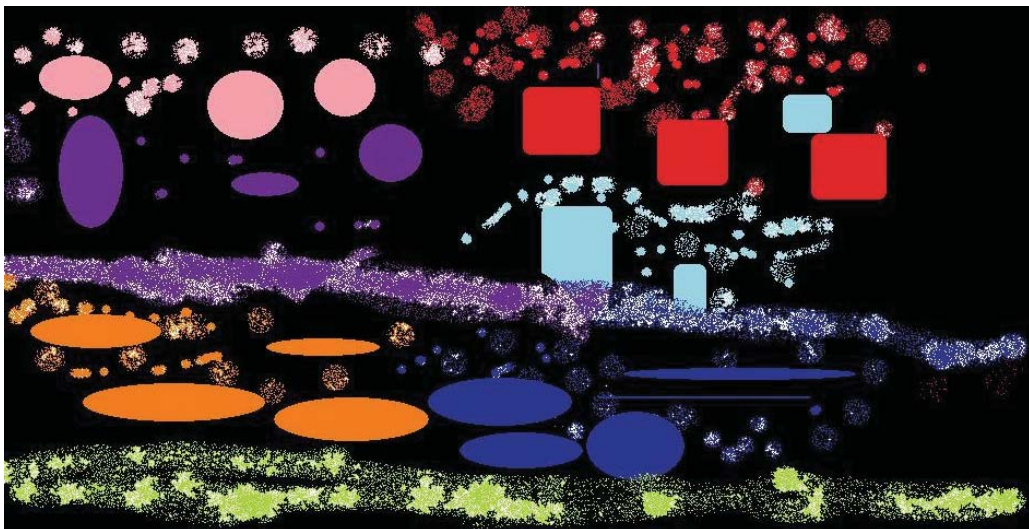
게다가 글에 녹아 있는 그녀의 사상적 기반이 (어쨌거나) 진보주의와 여성주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반면 문제의 해결에 있어 ‘국가주의’에 기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 우익을 빗대어 저자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박유하에 일본 우익의 대변자라는 누명을 씌운다면 그건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지적 편향에서 비롯된 ‘심리현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4. 박유하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의도된 조작은 없었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과 사실의 양과 질을 “과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허상을 낳는다는

점에서 둘 모두 유사한 거짓 효과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비난할 때 흔히 허위와 날조를 동반하는 전자와 같은 거짓말을 지칭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그것이 탄로날 때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정신병리적 징후나 과도한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거짓말에 탐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인간의 양심을 꺾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거짓말은 쉽지 않습니다. 적게나마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양심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양심에서 비롯되는 신념이 개입하여 사실과 과장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이 경우 발화자는 자신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거짓말이 초래하는 위험은 인지되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초등학교 1학년 딸이 PC 그림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목격담을 말하면서 '삼각형이 많았다'라고 말하면 단순 거짓말입니다. 삼각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이 많았다'라는 진술은 가우똥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삼각형의 축제를 그렸다'라고 이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이는 과장하는 방식의 거짓말입니다. 삼각형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형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삼각형의 축제를 그렸다'라고 말하면 마치 여러 가지 삼각형으로 가득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 이미지는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원형의 존재를 떠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과장하는 방식의 거짓말은 '다른 가능성'과 '다른 존재'를 잊게 만듭니다.



인간의 언어는 본디 과장성을 띠니다. 비유는 과장이며 과장을 하지 않고서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으며 또한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한 기분이 들게 마련입니다. 문학이 탄생하고 예술이 번성하는 배경에는 언어의 과장성-사고의 과장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과장의 밝은 면입니다. 과장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과장은 사회관계에서 증오심을 자극하고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과장이 가공한 이미지는 불안과 공포와 순수한 혐

오를 낳고, 그 이미지의 거센 흡인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과 다른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적대감은 과격화되며 집단적 감정으로 발전하고 국지적 충돌은 전쟁을 부르곤 합니다. 과장하는 방식의 거짓말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촉매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며 결국은 존재는 ‘거세된 존재’로 왜곡됩니다. 원하는 존재만 남고 원하지 않는 다른 존재는 거세됩니다.

거짓말에 대한 저의 이런 생각을 『제국의 위안부』 저자가 불러냅니다. 박유하는 위안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공적 기억은 과장하는 방식의 거짓말에 의해서 가공된 이미지임을 폭로합니다. 위안부의 모습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의 이미지로 고정되기 곤란하며, 마치 일제에 맞서는 순수하고 어린 조선 소녀라는 위안부 이미지는 대표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박유하의 주장은 그런 공적 기억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박유하는 속이는 방식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과장하는 방식의 허위를 지적합니다. 위안부의 대다수는 20대 이상이어서 10대 소녀를 상징화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공권력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는 위안부의 증언이 없고, 오히려 인신매매조직에 의한 개인적인 유인이었으며, 설치된 위안소의 상황마다 그녀들의 생활이 달랐고, 그들의 정신세계가 일제에 항거하는 투사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국가에 의해 징용되었으며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일본군 병사와 같은 처지를 나누기도 했다는 점을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90년대 초반부터 널리 퍼져서 이제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위안부에 대한 한국인의 공적 기억은 과장되어도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것이 필경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생각입니다.

##### 5. 위안부와 정신대는 다르다?

언어는 생각을 장악합니다. 언어는 생각을 촉발하고 반죽하고 발효하며 첨가하고 굳히며 또한 차단합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유 세계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뿐더러 인격과 교양까지 어림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프레임을 만듭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하이데거). 음해, 나쁜 소문, 이데올로기, 독재, 결속과 배제, 전쟁의 촉발은 모두 언어를 악용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언어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2500년 전 공자는 그 위력을 알았습니다. 공자는 참된 정치는 언어를 이치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논어, “必也正名乎”, “名”의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으며, 저는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언어를 탐구하는 학자들과 언어를 사용하는 정치인들은 언어에 대해 남보다 특히 높은 책임감을 지녀야 하겠지요. 언어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채 독주하면 존재를 왜곡하고 거세합니다.

제가 『제국의 위안부』를 읽고 놀랐던 것 중의 하나는 위안부와 정신대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랐던 점은 저자 박유하의 태도였습니다. 박유하는 그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고 태연하게 진술합니다. 박유하는 이런 사실을 책의 소제목으로도 사



용하지 않았습니다. 알 만한 사람은 이미 아는 상식이므로 굳이 특별히 취급할 것도 없으리라 저자 본인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그런 사실이 “활동가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활동가들은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어차피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유하는 그런 무책임함에 대해서 도발적으로 추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안부와 정신대가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지요.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신대와 위안부는 분명히 다른 존재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애매하게 겹치면서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한 결과를 만들어진 기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P.43)

“하지만 ‘정신대’란 남성들을 전쟁에 보내 노동력이 부족해진 일본이 여성들을 공장 등의 일반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만든 근로동원제도였다. 무엇보다 ‘위안부’와 이들이 다른 것은 ‘정신대’는 12세 이상의, 즉 중학교 이상의 ‘학생’이나 졸업생이 주요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위안부’들의 다수는 가난이나 가부장제 속의 교육차별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저학력이었지만, ‘정신대’에 동원된 이들은 대부분 학교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이들이었다.”(P.44)

“위안부의 모집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정신대의 모집은 전쟁 말기, 즉 1944년부터였다. 그리고 정신대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시행된 제도였다. (중략) 그나마 식민지 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 발동되지 않았다.”(P.43)

“조선에서 정신대 제도가 실제로 (법에 의거한) 강제적 동원 형태로 가동된 것은 1945년 8월인 듯하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1944년에는 조선에서도 정신대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배경을 신문(매일신보)은 이렇게 전한다.”(P.45)

사치와 향락과 안일만을 찾고 있던 양키 미국 여자들도 싸움에 지지 않겠다고 공장으로 몰려들어 벌써 전 미국 공원의 반 이상을 여자들로 채우고 있다고 한다. 이 양키의 도전을 마다할 황국의 여자들이 아니다. 다 같이 보내게 되지 않았는가. 이들 장성들이 정신하고 있던 생산진은 우리들이 굳게 지키기 위하여서 반도 여성들의 총궐기가 있어야 할 지금이다. 여자는 절대로 징용을 안 한다. 이러한 때 나의 뒤를 따르라는 듯 여성 진군의 봉화를 들고 일어난 근로농자군이 있으니 그 이름이 평양여자근로정신대이다. 이미 내지에서는 수많은 정신대가 조직되어 중산장으로 진군하여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는 터이지만 조선서는 이제 평양정신대가 여자

근로의 집단동원으로는 처음이다(매일신보, 1944. 4. 19. P.45에서 재인용)

저와 같은 보통의 한국인들은 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단지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두 단어 모두 일제가 강제로 잡아 가서 잔혹하게 능욕한 조선인 소녀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까닭도 없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명칭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였다는 점에서 의심하는 게 이상했던 것이죠. 박유하의 설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저자가 표현하는 방식과 독자가 받아들인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안부	정신대
처지	일본군 위안소에서 성노동과 성착취를 당함	군으로 징용된 남자 대신에 부족해진 군수 공장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근로동원. "근로정신대"
시기	"공창"제도가 있던 일본에서는 꽤 이른 시기부터 존재하였으며, 전쟁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증가	전쟁말기 1944년부터 일본에서 법에 의해 강제동원됨. 조선에서는 소규모 자발적인 동원이 있었고 강제동원은 1945년경
"주요" 대상	가난하고 교육을 못 받은 여성이 주를 이룸("대부분 주변 사람이 속여 데려가거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보호공간이 되지 못한 경우"). "식민지의 빈곤과 인신 매매조직의 활성화 등 전체 사회구조의 결과"를	12세 이상의 중학교 이상의 학생이나 졸업생이 주요 대상(상대적으로 어리고 고학력). "정신대에 동원된 이들은 대부분 학교 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이들이었다."
모집주체	민간 인신매매 업자들이 "개인 단위"로 모집. "실제 위안부들의 증언을 보면 단독으로 떠나간 경우가 대부분")	공권력이 동원되어 "집단적으로" 모집
숫자	정확히 알 수 없음. 단, 정신대와 혼동하여 그 숫자를 조선인 위안부 20만명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음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합쳐서 20만명으로 추정. 한국의 여성은 5~7만명으로 추산(정확하지 않음)
비고	(1) 전쟁 말기 근로정신대의 강제 징집에 편승하여 인신매매단들이 국가정책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위안부를 모집할 수도 있음 (2)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1) 근로정신대를 모집할 때에는 도장을 찍게 했으며,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했고 지장을 찍었다는 상황은, 위안부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 - 시골 동네나 도회지 길거리에서 가난하고 교육을 못 받은 계층 여성들을 유인하거나 신문에 공고를 내는 방식 -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2) 전시 "국가총동원" 체제에서 근로정신대를 이해

## 6. 정대협에 대한 도발적인 추궁: 정보 은폐와 공적기억 만들기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서는 현재 출판금지처분 소송의 대상이며, 저자 박유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소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위안부의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한다는 것이지만, 실은 위안부에 대한 다수의 견해와 다르며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협하는 ‘위험’한 주장을 하므로 출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런 주장은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국가가 권력의 힘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방식이 행정기관의 위력이 아니라 또 다른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려는 방식이라는 점과,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표현하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대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조치들은 다수의 감정에 호소하는 ‘도덕적 비난’에 기초하며, 그 도덕적 비난의 가장 큰 상위는 국가와 역사에 대한 ‘위험성’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독자로서 저는 그 위험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간단치 않고 매우 어렵다는 사실, 인류 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관점이 아니라 지구사적 관점으로 역사를 좀 더 넓은 시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는 점,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인간 집단의 광기’를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유하가 이 책을 통해서 파시스트처럼 순수한 혐오를 부추기고 전쟁의 발화점을 찾으려고 했다면 어쩌면 정말로 위험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유하는 순수한 혐오와 전쟁의 완전히 반대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지적 편향과 편견을 버리고, 그저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독자가 되어 이 책을 생각한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관여한다면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유하는 정대협에 대해 도발적인 추궁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추궁이 어쩌면 정대협이 쌓아올린 수십 년의 정치적 자산과 목표를 위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박유하는 “너희가 정보를 은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한국인의 공적 기억을 왜곡하지 않았느냐”고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제국의 위안부』가 출판금지되며 박유하가 침묵하는 게 확실히 이롭습니다. 물론 ‘침묵을 요구하는 소송’을 신청한 원고는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저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책을 차분히 읽지는 못했으며 그러므로 저자의 진심을 헤아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송의 배경과 맥락은 추리해 볼직합니다. 어쨌거나 ‘화해를 위하여’ 세상에 낸 목소리에 대한 대가로 ‘침묵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는 회초리를 맞게 되었지만 그 덕분에 저와 같은 독자도 얻었습니다. 침묵을 강요할수록 그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배양된 위안부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정신대라는 단어를 여전히

고집하는 ‘정대협’을 염두에 두고 박유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공통인식을 만들어온 것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다. 물론 다른 지원단체나 연구자들도 있지만, 정대협은 그동안 위안부에 관한 정보제공자로서 절대적으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안부에 관한 한국인들의 상식 -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가 된 20만 명의 소녀 -은 정대협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107)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오류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정신대를 위안부로 혼동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것처럼, 정대협은 위안부에 대한 이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저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바꾸거나 전시내용을 조금 바꾸었을 뿐이다. 그러나 정대협의 인식이 한국의 ‘공적기억’을 만들어온 만큼, 위안부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야 했다.”(P.116)

“일본 국가가 필요로 했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 휘말려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일본 국가의 ‘강제성’은 존재했다. 그러나 소녀들을 위안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끌려간 직접적인 주체는 대부분 포주이거나 업자였다. 그런데도 정대협은 ‘위안부를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연행, 납치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여성들’이라고만 설명한다.”(P.111)

확실히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정대협은 정신대라는 표현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마 미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유하의 주장을 들으면서 제가 추론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첫째 정대협의 정치적 목적과 이상을 달성함에 있어 ‘정신대’라는 단어가 효과적인 도구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위안부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이 없었으나 정신대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이 있었으므로 “일제의 강제”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 효과적이며, 둘째 나이 어린 소녀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안부’라는 단어가 일본식 표현이어서 딱딱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앞서 제가 말한 “과장하는 방식의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장하는 허위는 양심을 잘 위협하지 않습니다. 전쟁 말기 강제동원된 정신대의 경우에도 노동 착취와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정신대로 끌려갔다가 위안부가 되었던 경우도 그 사례가 적더라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대라는 명칭을 쓰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한다고 해서 정대협 활동가들은 크게 잘못된 일로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위안부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소녀상”에 대해서도

정대협은 정치적 승리감을 가졌을 거라고도 추측합니다. 이에 대해 박유하는 말합니다.

“소녀의 단발머리는 그녀를 단정한 학생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을 아예 혹은 조금밖에 받지 못한 이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소녀상은 실제 조선인 위안부와는 거리가 있다. (중략) 그러다 보니 소녀상은, 그녀가 때로 가족을 위해 나섰던 희생정신도, 아들이 아닌 딸이 팔려가기 쉬웠던 가부장제하의 피해자성도, 그녀들을 강제로 끌고 간 우리 안의 가해자들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녀상은 일본에 저항해 목숨을 잃은 유관순을 아주 많이 닮아 있다.”(P.205)

“결과적으로 그곳에는 조선인 위안부는 없다.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사관 앞 소녀상은 협력과 오욕의 기억을 당사자도 보는 이도 함께 소거해 버린 ‘민족의 피해자’로서의 상일뿐이다.”(P.206)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위안부 자신이라기보다는 정대협의 이상을 대변하는 상이다. 다시 말해 소녀상은 ‘그때의 조선인 위안부’라기보다는 ‘20여 년의 데모’와 운동가가 된 위안부이다.”(P.208)

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 그리고 정대협이 어떻게 자신의 이상을 실현에 왔는가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다루었던 “위안부란 도대체 어떤 이들일까?”라는 질문과 저자 나름의 연구내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양국에서 벌어진 그동안의 운동과 성과, 저자 나름의 역사인식 그리고 어떻게 화해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저자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영역에서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는 체계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만연된 무책임한 문화-목적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도구화된 언어-가 갖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존재에 맞추기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기호와 의지에 언어를 맞추는 것은 선동적인 효과가 있을지언정, 인류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이 그토록 저주와 비난을 받는 논점에 다가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유하는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 사이에 “동지적 관계”가 있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지적 관계는 동일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굳게 결연된 동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유하의 표현은 그런 정치적 합목적성이라는 맹렬한 의미가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조선이 처한 상황과 전쟁의 다양한 관계를 고려하면서, 일본군과 위안부가 처한 존재 그 자체가 동지적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존재론적 비유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다룰 주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대상을 바라보는 카메라 앵글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할 작정입니다.

## 7. 박유하 감독의 카메라 사용법

영화라는 영토 안에 들어 왔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미지의 왕국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감독입니다. 영상을 지배하고 카메라 앵글과 초점거리를 제어합니다. 클로즈업하여 한두 사람의 표정에 카메라의 초점을 맞출 수 있거니와, 멀리 떨어져서 롱테이크로 더 많은 사람들을 영상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기획하는 감독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뇌와 두 사람의 긴장감에 제삼자가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거리를 없앱니다. 관객도 함부로 ‘그 사이’로 못 들어갑니다. 반면 영상이 보여주는 세계가 다양하게 해석되기를 원한다면 카메라는 ‘사이 공간’을 확대합니다. 관객은 이미지 안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 세계입니다. 카메라가 만든 이 두 세계는 밤이자 낮이며 겨울이자 봄입니다. 두 세계의 이미지는 하나의 프레임에서는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더 긴 프레임에서는 서로 공존합니다. 밤과 낮은 하루라는 프레임에서, 겨울과 봄은 한 해라는 프레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계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박유하가 생각하는 화해는 밤낮과 두 계절의 양립불가능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화해가 아닙니다. 『제국의 위안부』에 녹아 있는 열망은 하루와 한 해라는 포괄적 시공간에서의 화해입니다. 아마 그렇게 저자의 화해를 이해해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 박유하가 이미지를 만드는 이쪽에서의 화해와, 다른 카메라 앵글과 초점거리를 통해 저쪽에서 이미지화된 화해는 너무 달라서, 다음 두 가지 가능성 외에는 서로 공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특별한 맥락”이 이 두 이미지를 이어줌으로써 하나의 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상 철학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두 이미지 세계를 굳이 잇지 않고 그저 옴니버스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관객이 느끼고 저마다 자발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인 성춘향과 제국의 주인인 와타나베만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전자는 식민지 조선을 상징했고 후자는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했습니다.

다. 성춘향은 피해자이며 와타나베는 가해자입니다. 성춘향은 성춘향 개인이 아니라 “위안부”로서 집단화된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와타나베는 와타나베가 아니라 “제국의 병사”를 상징하면서 집단화됩니다. 이 이미지의 긴장과 대립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므로 관객의 관점 또한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입니다.

와타나베는 종전 전후로 변함없는 테제(“정”)로 존재합니다. 제국주의 테제입니다. 성춘향은 안티테제(“반”)입니다. 정반의 모순 갈등을 거쳐 진테제(“합”)에 이르러야 합니다. 지양을 위한 대립은 필연적입니다. 전형적인 헤겔의 논리이며,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연립방정식입니다. 시민운동가들은 가감법으로 이 연립방정식을 풀고자 했습니다. 박유하의 ‘화해론’은 대입법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정식이 학생들이 푸는 일차연립방정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변수와 더 복잡한 차원이 있는 연립방정식이라면 해답을 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겁니다. 주류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집단적 차이성’을 부각하여 긴장과 대립을 강화해 왔으나, 박유하는 ‘집단적 동일성’을 강조하여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전자는 대립을 강화함으로써 역사의 변증을 도모하고, 후자는 대립을 약화함으로써 정반합을 꾀한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박유하도 헤겔적 방법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국의 위안부』의 감독은 완전히 다른 카메라 기법을 씁니다.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는 멀어지고 더 많은 것을 느리게 정적으로 보여줍니다. 박유하의 카메라는 성춘향과 와타나베 뿐만 아니라 ‘메이’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중국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녀는 네덜란드인이거나 동남아 여인일 수도 있겠죠. 메이의 대사에서 성춘향은 일본인으로 불립니다. 메이가 등장하자마자 와타나베와 성춘향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와해되는 것을 관객들은 느낍니다. ‘와타나베’는 적의 여자 메이를 윤간하거나 강간하여 살해하거나 혹은 성노예로 삼습니다. 그 잔혹성으로 말미암아 관객은 성춘향과 와타나베의 긴장과 대립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의 여자 ‘메이’를 호명했을 때 생기는 이러한 낯선 이미지를 박유하는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이미지의 정체가 “동지적 관계”라고, 『제국의 위안부』는 결론에 이른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성들을 군이 주체가 되어 ‘강제로 연행/납치’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전쟁터에서 개인 혹은 집단이 자행한 글자 그대로의 ‘강간’의 경우였다. 또 그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조선인 여성’이기보다는 타국 여성-적국의 여성이었다. 위안부 중에는 함께 있던 일본군이 중국인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기본적인 관계는, 그렇게 중국인과 일본군과의 관계와는 달랐다.” (P49)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은 일회성 강간과 납치성(연속성) 성폭력, 관리매춘의 세 종류가 존재했



다. 위안부들의 경우 이 세 가지 상황이 조금씩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조선인 위안부의 대부분은 앞에서 본 것처럼 세 번째 경우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중국 등의 점령지에서 많이 발생했던 첫 번째 경우나, 네덜란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경우까지 조선인 위안부의 경험으로 생각했다.”(P110)

#### 8. 화해를 위해 동일성을 탐색하는 작업

이 부분이 이 책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독자로서 저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마치 평론하듯이 말해보죠.

『제국의 위안부』는 기존의 상징을 해체합니다. 납치당하여 성노예로 전락한 식민지 조선의 가려진 소녀라는 성춘향의 상징성을 해체합니다. 성노예를 가두고 관리하고毆박하는 제국의 군홧발이라는 와타나베의 상징성도 해체합니다. 성춘향도 와타나베도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어야만 했던’ 구조적이고 획일화된 상징, 집단화된 기억과 억압적 메타포의 세계에서 ‘개별 인간으로서의 실존’을 박유하는 끄집어냅니다. 성춘향과 와타나베가 “개별 인간”이 되자마자 그들은 ‘당연하게도’ 차이를 얻게 되고 다양성을 획득합니다. 여자 성춘향은 그녀가 ‘강간적 매춘, 매춘적 강간’에 시달리는 성노예라는 점에서는 ‘위안부로서’ 동일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명의 사람이 되자 상황적, 심리적 ‘차이’를 띠입니다. 마찬가지로 와타나베는 제국의 동원령에 의해 대중심리로는 자발적으로, 구조적으로는 강제로 사지에 온 일본군 병사 개인이 됨으로써, 성폭력의 수행자라는 동일성의 규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존을 나타냅니다. 와타나베는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의 군홧발이 아니라 내일 죽을지도 모를 이런저런 병사가 됩니다.

박유하의 이와 같은 해체작업은 오랜 세월 축조된 고층빌딩 옥상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집니다. 흥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데에는 깊게 자리한 구조적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의 상징성과 일본병사의 상징성을 해체하면 결국 그것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체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 박유하의 작업은 위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춘향은 성춘향이고, 와타나베는 와타나베라고 말하는 순간, 역사라는 거대한 집단건축물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순한 박유하’는 균열과 붕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해체작업을 중지하고 묘한 복원술을 씁니다. 새로운 “집단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차이를 더 명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해체된 개인을 다시 집단화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동일성’으로 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춘향과 와타나베의 “동지적 관계”입니다. 저는 박유하의 매우 낮은 복원술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 납득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당혹감을 느끼며 여러 가지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개별 인간으로의 해체작업을 더 밀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한일 양국 간의 집단적 화해를 더 중요

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박유하의 이야기를 더 경청해 보겠습니다.

박유하의 해체된 개인의 “재집단화” 복원작업은 이중 구조를 뚫습니다. 제국의 군수품으로서 위안부 성춘향과 일본병사 와타나베는 일차적으로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고 박유하는 말합니다. 위안부와 일본병사는 제국의 강제동원령에 의해서 전선에 왔고, 제국의 전쟁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한쪽은 위안소로 한쪽은 병영으로 편제되었으며, 위안부와 일반병사 모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를 운명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동지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차이보다는 동일성을 지향하는 태도입니다. 그녀에게 “화해”는 차이를 드러내는 작업이 아니라 동일성을 탐색하는 작업으로 비쳐집니다. 여기서의 동일성은 실존적인 동일성입니다.

“그들은 양쪽 다, 국민동원이라는 국가 시스템 속에서 함께 움직여진 장기말이었다. 그들은 둘 다 성과 생명을, 그것을 담는 신체를 국가를 위해 바쳐야 했던 한 마리 개미들이었다.”(P79)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였다면 일본 군인들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에 의해 머나먼 이국땅으로 ‘강제로 끌려온’ 존재였다. 물론 그들에게는 조선인 위안부에 비해 남성이자 일본인이라는 지배적 지위가 있다.”(P74)

“여기에는 속아서 왔다면서도 군인들이 총알 맞는 것과 위안부가 된 것을 그저 운이 나빴다는 식으로 간주하고 군인을 원망하지 않는 위안부가 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미 식민지가 된 지 오래인 땅에서 자라나 자신을 일본의 일원으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성은 어디까지나 동족으로서의 군인일 뿐 적국으로서의 일본군이 아니다. 그녀가 일본군을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불행한 운을 가진 피해자로 보면서 공감과 연민을 표할 수 있는 것도 그녀에게 그런 동지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P75)

박유하의 두 번째 재집단화는 적국의 여자 메이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박유하는 동지적 담론을 말합니다. 성춘향과 와타나베는 위안부와 일본병사의 동지적 관계로 집단화됩니다. 성춘향이 비록 조선인이지만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 국적이며 2등 시민이어서 차별을 받았을지언정 적국의 시민은 아니었다는 점, 그녀의 의식에는 일본인 국적을 부인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며 그녀 스스로 적국의 여자 메이와 자기 자신을 구별했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전쟁 중의 일본 제국의 ‘아군’인 일본 병사와 “관계적 동일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춘향과 와타나베는, 나아가 위안부와 일본병사는 서로 동지적 관계라는 것이 『제국의 위안부』의 논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인간에서 다시 제국에 소속된 집단으로 해체된 관계가 복원되는 것입니다. 성춘향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로, 와

타나베가 아니라 일본군으로 재구축됩니다. 성노예 관점에서 위안부는 피해자이지만 적군과의 관계에서는 가해자 측에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 여성은 전리품이었다.”(P219)

“우리에게 오히려 이런 유의 증언들 쪽이 익숙하다. 거칠고, 폭력적이고, 심지어는 쉽게 살인을 저지르는 일본군. 그런데 그런 상황의 확인과 함께 주목해야 하는 건 이들이 ‘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여성은 위안부가 아니라 현지 여자라는 점이다. ‘트럭을 타고 있을 때 일본 군인들이 중국인 여자들을 강탈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중국 여자들 있으면 강제적으로 옷을 벗겨갖고 참 누워 자고 그란다고. (우리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옷 벗기고 그러지 않지’라는 말도 그런 차이를 보여준다.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적의 여자’와는 다른 관계였다.”(P79)

독자가 감정을 억누르고 인내성을 발휘한다면 박유하의 동일성 탐구를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들은 어렸거나 태어났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몽되어 있지 않는 한 조선독립을 열망하는 독립투사는 아니어서 스스로 일본인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조선인의 의식과 당시 시점에서 생각하는 조선인의 의식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터입니다. 이와 같이 실존적 동일성에 더해 관계적 동일성을 이중화함으로써 이 동일성을 한국과 일본으로 각각 집단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지금까지 집단화된 증오의 기억을 넘어서 양국 간의 화해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아마도 『제국의 위안부』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9. 반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열폭과 옹호

위와 같이 이중화된 동지적 관계, 즉 위안부와 일본군의 실존적 동일성과 관계적 동일성의 탐색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동지’라는 단어는 의지지향적인 단어이지 실존지향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동지관계”는 ‘같은 의지’를 갖는 사람 사이의 맹렬하고 단단한 관계를 지칭합니다. ‘같은 처지’라는 실존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표와 박유하의 기의 사이에는 깊은 현해탄이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유하의 동지적 (비유) 담론은 ‘동지담론’으로 단순화되며 반대자들의 첫 번째 열폭을 부릅니다. 박유하의 동지적 담론은 무시되며 단순화된 ‘동지담론’으로 흡수되고 맙니다. 맥락과 의도와 진심은 사라지고, “위안부는 일본군의 동지였다”라는 가공의 문장만 깊이 패입니다. 이렇게 저자의 맥락을 초월하여 단순화된 문장이 침묵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소송의 원

인이 됩니다

#### 10. “위안부가 일본병사와 동지라고? 이런 천인공노할!”

앞서 말한 것처럼, 박유하의 카메라는 먼 거리에서 롱테이크로 대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유하는 일본군에게 윤간당하고 강간당하고 끌려가서 살해당하거나 노예로 비참함을 겪는 메이를 보여줍니다.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적국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적국의 여자를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위안부와 일본병사의 동지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유하의 태도에 대해서 두 번째 열풍이 벌어집니다. 성춘향보다 더욱 참혹한 메이가 등장함으로써(전쟁 중의 참혹함은 서로 견주기 어렵습니다만), 성춘향이 당시 처한 비참하고 잔혹한 실존이 상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춘향이 상대화되면, 위안부 존재와 대립쌍을 갖는 일본군의 만행이 은폐되고 맙니다.

메이의 등장은 군국주의 시절의 일본군의 만행을 더욱 증폭하겠지만 그만큼 위안부 문제는 상대화됩니다. 전쟁이라는 보편적인 참혹성으로 말미암아 위안부 문제가 묻힐 수도 있습니다. 메이의 피해는 광범위하고 잔혹하지만 당시에 혹은 이후에 대부분 당사자들이 죽었을 것이어서 메이는 실체를 갖거나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화된 특수한 범죄(제국의 위안소)가 비구조화된 보편적인 전쟁범죄에 의해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활동가들로서는 박유하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일성을 추구하는 『제국의 위안부』는, 저자가 분명한 어조로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촉구하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도드라지게 대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유하의 담론에 완전히 공감합니다(더 좋은 방법론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악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 자체가 반발을 불러오지만, 저자가 논증하는 것처럼 제국시대의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 병사라는 개별 인간의 실존과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한다거나, 악의가 있다거나, 혹은 당시 당사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인간은 생각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게다가 메이의 등장이 초래한 관계적 동일성, 요컨대 두 번째 동지적 관계의 효과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진실이기 때문이며 진실이 정치적 유불리로 은폐되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진실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의 차이이며, 이 생각의 차이도 집단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실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메이의 등장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역사청산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청산은 보상과 책임추궁보다 더 큰 차원까지 나아가야만 비로소 현재

와 미래의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독자로서 박유하의 작업은 매우 신선했을 뿐더러 의미 있었습니다. 이 책의 빛나는 점은 위안부와 일본군을 “개인화”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시점으로 가공되고 왜곡되기 쉬운 “집단 기억”에 대한 도전입니다. “집단 기억”이야말로 순수한 혐오를 남발한 20세기의 광기의 거대한 원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의 부제로 명기된 “기억의 투쟁”은 지난 세기의 광기에 대한 투쟁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기억이 아니라 개인기억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모든 오류, 그 오류조차 꽃입니다.

### 11. 질문에 빠진 『제국의 위안부』의 독자

이 책이 가장 답답했던 것은 화해로 이르는 길이 매우 거칠다는 점입니다. 어째서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필연성을 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설령 화해의 필연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째서 그 화해가 “집단화”되어야 하는지 미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박유하의 관점이든 아니면 한국 주류의 관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해체작업을 더 밀고 나가서 차이성에 기반한 화해를 재구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쉽게 일본과 일본인을 구별합니다. 적대감과 증오를 서슴없이 표현하면서 국가와 개인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혐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나는 그런 답변에서 진심을 느끼거나 정합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저는 내 안에서 쏟아지는 자발적인 질문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순수한 혐오와 증오에 있어 ‘일본’과 ‘일본인’을 명쾌하게 구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적대감의 대상을 일본이라고 했을 때, 일본의 무엇 혹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일본 정부? 일본 국가기관? 일본도 민중이 있고, 대중이 있고, 다중이 있으며, 여론이 있고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개개인을 제외하고 일본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역사 문제에 관해서 사죄를 받는 당사자는 누구일까? 사죄와 용서라는 것이 과연 집단적 개념일까? 집단적인 사죄, 집단적인 용서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집단적이고 조직화되며 국가적인 화해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집단적 화해가 가능하다면 그건 아마도 화해의 최종심급에서 벌어지는 쇼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이를테면 국가수반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와 문장이 수많은 카메라에 의해 녹화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죄와 용서와 화해도 구조화 되고 법제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개인적인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 12. 미로에서 역사라는 시공간을 생각하다

『제국의 위안부』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문장을 공평하게 읽는다면 아마도

청소년조차 저자의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문학 도서’입니다. 선의를 잊지 않으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자 또한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때때로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여러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의 하나, ‘화해’라는 이미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재판”의 원고들은 화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이미지조차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원고들의 생각은 완고합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함수상자에도 화해라는 단어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와야만 나올 수 있는 종속 단어입니다. 저쪽의 사죄가 없다면 이쪽의 화해는 금기입니다. 저쪽의 사죄가 없다면 저쪽의 화해는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의 사죄” 그리고 “책임 있는 사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과 책임성은 저쪽이 아니라 사죄를 받는 이쪽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죄를 판단하고 누가 그 사죄의 책임성을 판단하며 누가 화해를 결정할 것인지? 미로에 빠진 나는 생각에 잠깁니다.

여기,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만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 논리는 올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사죄와 화해(용서를 포함한 화해)는 반성적 사유가 필요하며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자 편의적 행위주체이지, 사유와 양심의 주체가 아니어서 사죄와 화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사죄 판단, 책임성 판단, 화해 결정의 주체 또한 국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반대의 생각은 아무래도 국가주의적인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정부”가, “과거의 국가”가 잘못된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여러 모로 뜻 깊은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과가 그 사회의 상식과 교양에 의해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쥔 일부 “정의(?)로운 세력”이 반대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단한 것이라면, 정권교체에 의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 그런 역행은 화해를 위한 노력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적대감과 더 큰 불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도 크다 하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집단이 있겠으나 그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부관참시 외에는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청산하며, 미래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 미로에서 나는 역사라는 시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글로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뾰족하고 낮은 이야기를 할 작정입니다. 아마도 다른 길입니다.

세계는 “사이”에 존재합니다. 추상적이고 어찌면 난해한 표현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의 사이 그리고 공간의 사이에 만물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만물이 존재하

는 형식인 것처럼 보입니다.7) “역사라는 공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역사는 총체적으로 명사이며, 또한 동시에 총체적으로 동사입니다.

“현재”는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점유하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특정 시점(Tx)에서 존재하지만 시간 사이( $\Delta T$ )에서는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매 순간 휘발됩니다. 붙잡을 수 없으며 등장하자마자 즉시 과거가 됩니다. 이렇듯 현재가 “사이”를 갖지 못하는 까닭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추측하건대 현재는 “개념”과 “관계”에 의해서만 정의되고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한 고등학교 수학 이야기를 더하겠습니다. 시간 함수를 특정 시점(Tx)에서 미분하면 접점의 기울기가 됩니다. 현재가 만일 개념과 관계에 의해서만 정의되고 존재할 수 있다면, 모든 개념과 관계는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특정 시점(Tx)에서의 접선의 미분 기울기입니다.

“과거”는 시간 사이( $\Delta T$ )에 존재하지만 공간을 점유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 사이도 휘발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실재하지 않으며 “해석”에 의해서만 존재성을 획득합니다. “사료史料”는 과거라는 존재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수학 개념으로 비유하자면, 현재가 미분이라면 과거는 적분입니다. 과거는 시간 사이( $\Delta T$ )에서 적분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모든 오해는 적분이 아니라 미분에 의한 해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은 지나간 시간 사이에서 과거를 해석하기보다는,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시점(Tx)에서의 역사 해석은 모두 편향을 지니게 됩니다. 한편, 해석은 해석자의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에, 과거는 해석자의 관념에 의해 정의, 탄생, 구축, 소멸, 재구축되곤 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라는 문제는 종종 해석자들의 집합에서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는 개념과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고, 과거는 해석에 의해서만 존재성을 지닌다는 생각에 이르자, 개념, 관계, 해석이 모두 인간의 생각과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까닭에, “인간이라는 주체”를 제외하면 현재와 과거 모두 온전한 존재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판단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은 인간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으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물론적 생각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허하며 때때로 맹목적입니다.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생각할 때 한 개인 차원의 것이든, 인간 사회에 관한 것이든, 역사든, 정치든, 문화든, 철학이든, 경제학이든, 무엇이든 인간을 당연하게 개입해 놓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

---

7)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간 사이와 공간 사이에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초월존재’라고 부릅니다. 초월존재가 인간에 미치는 근원적이고 강한 힘에 대해서 언젠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초월적 환경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컨대 꿈, 환상, 상상, 환경, 환각, 환영, 신, 영적인 어떤 존재, 기표와 기의 사이의 혼란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 건물의 시간 사이( $\Delta T$ )에, 그리고 건물의 공간 사이( $\Delta S$ )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시공간 사이 안에는 건축가, 건물의 유래, 기능, 구조, 그 안팎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안주합니다. 현재와 과거는 물질 덩어리나 빈껍데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은 대상일 뿐 법칙이 아닙니다. 진보주의자들의 상당수는 과거든 현재든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당위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마치 성스러운 진리를 앞둔 종교인처럼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할 때입니다. 이런 질문이 여하한의 답변을 호명하자마자 소위 객관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행위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입은 사실 정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현재는 개념과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고, 과거는 해석에 의해서 존재성을 지닙니다.

위안부에 관련한 문제 그리고 나아가 식민지 시절의 역사 청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존재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문장은 과거의 존재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석이다”를 놓고 과거의 존재성을 드러내면서, 어떤 해석이 올바르고 바람직한지를 따지는 태도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개념이 필요하며(그것이 화해이든 무엇이든) 또한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현재의 존재성을 주고받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옳다는 것이지요.

개념과 관계와 해석이 “공론”을 만듭니다. 결국 공론이 역사를 결정한다고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공론이 언제나 열려 있고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빈사 상태에 빠진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 경우는 대개 어떤 소수의 권력이 개념과 관계와 해석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다른 개념, 다른 관계, 그리고 다른 해석을 합니다. 『제국의 위안부』가 드러낸 위안부에 관한 -식민지 시대로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는 주류가 해석하는 과거와 다른 존재성이며, 현재의 존재성 또한 다릅니다. 과거는 해석에 의해 존재성을 획득하고, 현재는 개념과 관계에 의해 정의되게 마련이어서 그런 차이는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옛날 칸트 할아버지는 “공간과 시간은 인간이 가진 감성의 형식적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물의 관계의 존재성은 인간의 사유와 인식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칸트 할아버지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매 순간 휘발되는 현재는 개념과 관계의 의해서만 존재하며, 공간을 점유하지 못하는 과거는 해석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결론은 기계적인 유물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와 이어집니다. 그 세계는 유물론보다 훨씬 진보적인 세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시간 사이( $\Delta T$ )와 공간 사이( $\Delta S$ )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존재할 뿐입니다.  $\Delta T$ 의 간격이 커질수록 잠정적이며,  $\Delta T$ 의 간격이 좁을수록 확정적입니다. 미래는 벡터이지만, 그 방향성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 유보된 방향성에 관계합니다.



### 13. 변증법을 부인하면서 집단에서 개인으로

역사학은 시간 사이( $\Delta T$ )의 간격을 조정하면서 과거의 소멸한 공간을 탐색합니다. 역사학의 관심사는 특정 시간 사이와 공간 사이에 대한 존재론적 탐색이자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사이( $\Delta T$ )와 공간 사이( $\Delta S$ )에 관련한 객관적인 사료 중심의 학문적 태도는 역사학의 의무이자 근본입니다.<sup>8)</sup> 반면 역사철학은 미래의 벡터들의 유보된 방향성을 탐색합니다. 역사학과 역사철학은 이와 같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교차합니다. 과거를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그런 의도는 당연히 역사철학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은 “해석”에 의해 과거의 존재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미래 벡터들의 유보된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존재성과 미래 벡터 사이에는 과거를 ‘읽는’ 대중들이 있고, 이 대중들을 선동하거나 이끌려는 ‘정치’가 있습니다. 역사학과 역사철학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그 사이에 정치가 존재합니다. 역사학은 정치학이라고 말해도 좋고, 역사철학은 정치운동이라고 선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대립과 갈등을 자신의 존재성으로 삼아 왔습니다. 나는 그 존재성에 의문을 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역사철학으로 대표적인 것이 변증법입니다. 현재의 규정성으로 테제(正)를 삼고, 이 테제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안티테제(反)가 존재하며, 이들의 투쟁을 통해서 진테제(合)가 이루어지면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이 변증법의 논리입니다. 이런 헤겔의 변증법은 맑스주의자에 의해서 전복적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의 발전을 신봉하는 대부분의 진보주의자들의 기저에 흐르는 역사인식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헤겔에게 역사란 결국 절대정신의 실현과정이었으나,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적대세력을 물리치며 얻는 사회변혁의 필연적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정과 반의 모순은 “내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있겠니”라는 상호 의존성에 기초하며, “우리 이제 한 몸이 됐어”라는 동일성으로 회귀하면서 합의 경지에 이릅니다.

변증법의 문제는 지나치게 “동일성”을 탐색한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개별 인간의 차이를 목살한다는 점입니다.<sup>9)</sup> 또한 대립과 갈등은 역사적으로 정당화됩니다. 또한 변증논리에 따르면 역사에 대한 해석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나치게 집단화되거나 검열되기도 하며, 왜곡과 과장을 통해 적대감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체적 목표에 의해 성립된 각종 개념

8) 물론 사료가 과거의 사실을 입증하거나 결정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자기 검열을 거친 증언보다는 사료가 훨씬 객관적이지만, 악의적인 왜곡과 은폐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료는 과거에 관한 어떤 “해석”을 입증하거나 결정합니다. 요컨대 과거의 사실은 “해석적 사실”입니다. 물론 사료에 기반한 해석이 진리(Truth)에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해석이 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해석으로 격하되었다고 해서 사료의 중요성과 존엄성이 함부로 격하되지는 않겠죠. 낮아지는 것은 반대쪽 해석에 대한 고압적 태도입니다.

9) 이는 프랑스 현대철학자 질 들뢰즈의 견해로부터 얻었습니다.

이 권력을 얻게 됩니다. 결국 개인의 차이가 그 공동체적인 개념에 승복하는 관계를 만들고, 미래 벡터들의 방향성을 확정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변증법적 역사철학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역사철학에 변증법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테제로서 집단 A 그룹이 만들어지고, 안티테제로서 집단 B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대립 관계에서는 집단 A 그룹에 속하는 개인의 차이성이 은폐됩니다. 집단 B 그룹에 속하는 개인의 차이성 또한 마찬가지로 은폐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차이가 동일성에 앞섭니다. 요컨대 인간은 저마다 지문이며 나와 남이 동일하기 전에 이미 차이가 있습니다. 변증법은 개인의 지문을 지웁니다. 모순이 정치적인 국면일 때, 테제와 안티테제는 저마다 개인을 억압하는 권력으로 작동합니다. 테제와 안티테제는 각각 같은 동일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그 경우 테제와 안티테제는 개별 인간의 차이에 대해 침묵을 요구합니다. 나는 이런 침묵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에서 성춘향이 은폐되고, 일본군에서 와타나베가 은폐됩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홍길동이 지워지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스즈키가 삭제됩니다. 동일성으로 대표되는 집단 이데올로기가 개념과 관계와 해석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적대적 집단끼리 대결합니다. 집단적 대립이 심화되면 집단에 대한 개인의 종속은 강화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는 명시적인 표현으로 반발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인 취지로 반발했습니다. 박유하의 맥락은 “개인의 지문이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빛나는 맥락입니다. 나는 이 맥락에 밑줄을 긋고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박유하는 개인의 차이로부터 발생한 역사문제의 새로운 창을 열지는 않았습니니다. 나는 박유하가 열지 않은 창을 열고자 합니다.

#### 14. 구조적 접근에서 내재적 접근으로

역사진보의 특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진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역사인식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모든 구조적 접근은 역사발전에서의 개인적 차원을 습관적으로 묵살합니다. 산업경제적인 발전으로 역사진보를 생각하는 것은 수 세기에 걸친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합니다. 높은 GDP를 자랑하는 곳에서 사는 개인과 낮은 GDP를 보이는 곳에서 사는 개인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갈등의 구조적 접근으로 역사진보를 생각하는 관점은 사적 영역에서의 지배/피지배를 보지 못할뿐더러 해방된 민족이나 전복에 성공한 피지배계급의 억압 구조를 외면합니다.

나는 구조적 접근보다는 역사 진보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개별 인간’으로 ‘내재화’되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며, 이는 인간 마음속의 빛나는 불빛을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역 사진보가 내재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 불빛이 흐려지고 꺼지면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 개인의 種적인 파국을 초래합니다. 또한 그런 개인들이 많아지면 집단의 파국을 불러옵니다. 어떤 가치가 인류의 도덕적 보편법칙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곧 그 가치가 대다수 개인들에 의해 내재화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한국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산업경제적 관점으로 식민지 시대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심은 도덕법칙은 무엇일까요? 힘의 권위와 집단에 대한 예속을 팽창시켰을 뿐 일본의 일등 시민뿐만 아니라 조선의 이등시민에게 개인적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에 의해서 인간의 도덕법칙이 확장될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시대의 역사가 구한말보다 더 진보된 역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식민지 시대는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광기의 지배’만이 공고화됐을 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서구열강의 정신세계 중 가장 나쁜 것만을 수입하여 아시아를 침략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빛나는 불빛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며, 언제나 올바른 것입니다. 칸트는 이를 ‘실천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감각이며, 보편적인 법률입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인간 내면의 공통된 명령(칸트의 정언명령)의 관점으로 볼 때, 역사는 그 명령의 항목을 입법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천이성의 정언명령 입법 과정”으로서, 역사를 해석하고 또한 미래의 후보된 벡터들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역사철학입니다.

실천이성은 구조화된 개념이 아니라 개별 인간의 마음속으로 내재화되는 개념입니다. 개인의 보편적인 도덕법칙의 확장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개념화하며 관계를 규정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사철학은 구조적 접근 혹은 집단적 접근을 두 방향으로 해체합니다. 한편으로는 개인화하여 내재적으로 해체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류화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해체합니다. 해체는 해결이 아니라 재구축입니다. 이 두 방향은 동전의 앞뒷면이자 자용동체입니다. 인류화되는 법칙은 반드시 개인화되기를 요청합니다. “인류”는 한 인간이 절대적으로 속하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그 외의 다른 집단을 절대화하면 대립과 갈등을 초래합니다. 대립과 갈등은 어떤 인류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간의 도덕법칙의 확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따름입니다.

십계명 시대의 계율은 그 시대의 도덕률을 보여줍니다. 신성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법칙을 세웠으나, 이교도를 살해하는 것은 도덕법칙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 적군에 대한 학살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포로에 대한 인간적인 취급이 그래서 안 된다는 인간의 공통감각으로 들어온 것도 인류 역사의 수천, 수만 년을 보낸 다음에야 이루어진 최근의 성과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진보함으로써 전쟁 중 학살이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는 법칙”안으로 포섭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는 지구사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국지적입니다. 아직 중동의 곳곳에서는 역사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살과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의 적대감이 인간의 보편적 도덕법칙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도덕법칙의 확장과 내재화를 위해 햇불을 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순수한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이 더 큰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적국의 여성에 대한 강간은 인간의 역사에서 비참하고 잔혹하지만 인류적 관점으로 보자면 예전에는 금기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예 제도 이후의 도덕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저마다 이를 범죄로 생각하는 마음속 등불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보편적 도덕률이 확장되었고 개인마다 내재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전쟁 중 성노예 문제도 당시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살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도덕법칙에는 잘 포섭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반세기 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고, 1973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인 기자 센다 가코의 탐사에 의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졌고,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한국에서 공론화되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야 과거를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조선인 위안부”라는 과거가 존재성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가 인류에 어떤 교훈을 주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법률을 입법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류 생각처럼, 국가(일본제국주의)가 강제로 조선인 여성을 포획하여 위안소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지나치게 잔혹해서 블랙홀이 하나 생깁니다. 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처벌과 사죄” 담론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찰은 과거에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이런 까닭에 위안부 문제는 당대의 새로운 도덕법칙의 입법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심각성은 당시의 도덕률에서도 금지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국의 위안부』가 말하는 것처럼, 조선인 위안부이든 일본인 위안부이든 아니면 네덜란드 여성처럼 적군의 포획된 위안부이든, 일본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된 위안소가 있었다는 사실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삼는다면, “공권력”에 의한 전시 여성의 성노예 금지는 새로운 도덕법칙의 입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요컨대 박유하의 견해라고 해서 역사적 의의가 부인되지는커녕 그것만으로도 반인륜을 판단하는 우리 안의 양심의 불빛이 환하게 쬐깹니다. 게다가 박유하의 주장은, 주류 생각보다, 가부장 사회와 자본주의 시스템과 국가의 “공인”이 만나서 벌어지는 평시 여성의 참상에 대한 성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 15. 집단적 사죄와 집단적 용서와 집단주도의 역사청산 프레임의 뒷

우리가 만약 역사의 진보를 “인류의 도덕률의 확장”으로 이해한다면, 옳고 그름이 함부로 집단화되지 않습니다. 내 안의 도덕법칙은 당신 안의 도덕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곧 인류입니다. 인류의 최대단위가 곧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내면화되지 않는 도덕법칙은 보편적 법률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국가 강제성에 의존하는 법률을 마치 도덕의 잣대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운동가들은 새로운 입법을 청원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습관적인 법치주의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무엇이 위법한 일인가로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나아가 소수 견해를 지닌 사람들을 간단히 위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의 뒷입니다. 우리가 지닐 보편적인 법률은 내 마음, 그리고 당신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잔혹한 과거사에 대한 청산은 어떤 집단이나 민족이나 국가 차원이 아니라 “숭고한 양심에 기초한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야말로 인류의 최대단위라고 믿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면죄부를 발급하자는 것이냐, 더 나은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느냐,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자는 것이냐 등등. 반론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청산은 역사를 해석자의 입장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보된 미래의 방향성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한 자리에 모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와,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복잡한 열개라는 점을 인정하고 과거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자신이 속한, 세력과 세력에 의해, 국가와 국가에 의해, 민족과 민족에 의해 집단화되면 될수록 자기 양심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견해를 밝히기 힘들게 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 개인의 양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집단의 해석 방침과 기준에 순응해서 이루어지는 문화가 고착되고 맙니다. 집단적인 해결방법은 해석을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과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존재는 거세됩니다. 집단적인 사죄, 집단적인 용서, 그리고 집단적인 화해는, 그 집단을 이루는 개인의 생각이 전체적으로 서서히 바뀌지 않는 한, 어느 순간 기념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둘째, 전후 독일의 경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치 시절의 패악을 거의 완전히 청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독일 정부의 수반이 배상하고 사죄를 공식화했기 때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독일 국민 저마다 개인적 차원으로 “나치 시절의 독일”을 청산했기 때문으로 이해합니다(물론 정부의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인륜성”은 개인이 청

산해야 청산되는 것이지 국가가 청산한다고 해서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사죄를 많이 한들, 일본 사람 개개인이 군국주의시절의 침략과 전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의 과거사 청산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전두환 독재정부 시절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국가적 반성을 정부 수반이 한다고 한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과거의 어두움은 청산되지 못합니다.

셋째, 불빛은 바람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내면의 타오르는 도덕률과 양심도 적대감과 증오라는 감정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적대감이 커지고 순수한 증오심이 팽창하면 인간 내면의 불빛은 꺼집니다. 19세기 독일의 지적 흥분은 인류의 정신세계를 넓혀주었으며,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보편적 도덕법칙을 가르친 철학자 칸트의 나라가 독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독일에서 가장 흉악한 정권이 등장했으며, 대중들은 나치를 찬미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혹시 적대감과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대감과 증오심을 억제할 수 있을 때에만 인류의 인륜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집단화된 과거사 청산은 적대감과 증오심을 쉽게 조장합니다.

넷째, 과거사 청산은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일 테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는 “해석”에 의해 존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대해석을 하는 사람의 반발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존재성은 복수일 수 있으며, 전제국가가 아닌 한 복수의 과거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과거사실에 대한 청산이지만 저쪽에서는 ‘저런’ 과거사실에 대한 왜곡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는 끝났고 일본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은 소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의 죽었고 이제 와서 칼을 휘두르듯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다섯째,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사 청산에 필요한 사죄와 용서와 화해는 그 속성상 집단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죄와 용서와 화해는 반성적 사유가 필요하고 또한 양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사유와 양심의 주체는 “인간”이지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죄를 하고 국가가 용서를 발표하고 서로 화해를 선언하며, 어떤 단체가 사죄를 하고 또 어떤 단체가 용서하고 또 화해를 선언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책임자”가 사죄를 선언하고 용서를 표명하며 화해의 성립을 공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현재 없고, “이론적인” 책임자만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민주주의 통치 방식에서는 여러 정치세력이 존재합니다.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으며,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자, 종교주의자, 무정부주의자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자가 선거에 의해 집권한 다음에 과거사를 청산하겠다고 공표하

더라도, 그 반대 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다음에 그 공표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경우에, 적대감과 증오심이 퍼지고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한 사죄와 화해는 공론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언제나 부작용이 따릅니다. 특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역사 문제가 놓여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비난 혹은 전쟁 외에는 국가 간 역사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국가에 의존할수록 평화는 연약합니다.

일곱째, 집단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의 반성이 개인의 반성을 가로막거나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여러 차례 사죄를 했습니다. 그 표현방식에 대해서 일본사람이 느끼는 언어감성과 한국사람이 느끼는 언어감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합니다. 개인은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는데 국가가 이미 반성했으므로 굳이 개인이 반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국가의 반성과 개인의 반성과 서로 같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일본인은 아마 이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현재의 일본 사람에게 “너 때문이야, 네가 반성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성”이라는 의미는 “반성적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사람들도 동일하게,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인류의 성원으로서, 일본사람처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집단적 사죄와 집단적 화해와 집단주의의 역사청산 프레임은 잘못 되어도 상당히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을 넘게 지속된 그런 시도가 결국은 일본사람과 한국사람 사이에 혐한과 혐일을 낳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에 관한 국가의 역할은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류도덕률에 의한 반성적 사유로 내재화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사죄를 요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책임성과 수준을 평가하고, 국가적 차원의 진심과 태도를 추궁하고, 국가적 차원의 화해를 선언하는 일련의 기획과 행동은 역사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문의 증진, 활발한 교류, 홍보, 계몽, 문화행사, 상호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기획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적은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과 일본을 막론합니다. 자기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정치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대감과 증오를 선동하는 그들은 역사진보의 적입니다.

『제국의 위안부』로 다시 돌아와서, 예컨대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반인륜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과하며 역사의 교훈을 반복하지 않도록 널리 퍼뜨리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개인차원의 내면화로 진입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시민운동단체는 ‘개인에 대한 내면화’가 아니라 더 많은 ‘국가적 요구’를 얻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운동’으로 점화하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양국 개인의 마음속 불빛을 점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혐오의 감정만을 점화했을 뿐입니다.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가 말하는 맥락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길게 글을 썼습니다. 어떤 생각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와 같을 것이고, 어떤 생각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힘겹게 글로 옮긴 생각만이 다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글에 관련한 모든 생각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 빛을 졌습니다. 이 글의 단정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스스로를 반성하고 비판하면서 더 나은 생각, 역사를 바라보는 보다 맑은 눈을 기대할까 합니다.